

민주 “6월 국회서 25만원 민생지원금·특검법 우선 처리”

행동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책조정회의... ‘처분적 법률 위헌’ 지적에 ‘논란은 성급’

조선 당선자들,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

더불어민주당은 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변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판단, 거센 입법 드라이브로 정부·여당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

금 지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내실 있는, 실 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는 질문에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감대 속에 통과시킨 것인 만큼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방송 3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 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별도의 정책기획 단위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기존에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하고 그중 일부를 당론으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당차원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당론 법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조선 당선자’들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조선 당선자는 60여명으로, 이들은 하루에 10명씩 돌아가며 천막농성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국민 분노 임계치”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야권 170석때도 대통령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쓰아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적정히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

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저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자 아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라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금융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민진 당선인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물귀신 작전인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국힘 전대 연기, 8월로 못박은건 아냐”

황우여 비대위원장 “당헌·당규 개정에도 시간 걸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물리적 여건상 ‘6월 말 7월 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당 전대 연기론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데 대해 “윤 대표 말씀이 맞는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 모든 것이 주변 인선과 맞물리지 않느냐”며 “원내대표가 오늘에야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이나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역사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며 “(6월 말~7월 초에 전대를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스태프를 해야 하는데 그사이 준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절차를 밟다 보면, 전당대회가 당초 당에서 거론되던 6월 말~7

월 초보다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또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걸 합부로 했다가는 후유증이 크다”라고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일부 당권 주자가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20년 된 전통이고 여러 논란을 거쳐 확립된 것”이라며 “논의하자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반영하는 문제가 당 안팎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 모신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도부 체제가 7번째로 바뀐다”며 “송구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다. 당을 위해 멸사봉공하고 선당후사 정신이 확실한 분이 들어서 몸 바쳐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정부, 기후재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하라”

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진보·장흥1) 전남도의회 의원은 9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이상기온(2월 고온·4월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오이, 수박, 메론 재배하우스 등은 물에 잠겨 수확이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마늘(벌마늘 현상) 품질 저하, 양파(노균병·뿌리 썩음병)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전남 곳곳에 발생한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보리, 귀리, 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해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결속한 사료도 비에 젖어 눈에서 썩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수년 전부터 식량·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난이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성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을 투입해 피해 농민들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